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3262
결재일자	2015.2.2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치행정담당	자치행정과장	행정국장		
이노영	위상복	박성도	02/25 손정수		
협 조					

---

## 2015년 주민등록·인감업무 진위확인시스템 구매 설치계획

---

**2015. 2.**

**행 정 국  
자치행정과**

# 2015년 진위확인시스템 구매 설치 계획

최근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주민등록·인감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원업무 처리시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신분확인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주민의 재산과 권익보호를 증진 시키고자 함

## I 추진배경

- 위조된 신분증 및 증명서를 이용한 주민등록·인감사고 발생
- 현재 보유하고 있는 (주)한국타피(TAPI)지문인식기는 2013. 1월 부터 주민등록전산센터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사용시 컴퓨터와 충돌 등 잦은 오류 발생
  - 교체수량 : 14대(총 87대 보유-민원담당:89명)
  - 교체대상 : 민원여권과 및 12개동(삼선동, 동선동, 돈암1동, 보문동, 정릉1동, 정릉3동, 길음1동, 길음2동, 종암동, 월곡2동, 장위2동, 석관동)

## II 추진방향

- 활용분야
  -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·초본 발급시 지문확인을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
  -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통하여 위조신분증 판별 가능

● 운영방법

- 민원신청 →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불명확한 경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하여 무인 확인, 주민등록증 위조여부 진위 확인 → 본인확인 후 민원처리
- 입력된 지문은 DB에 저장 가능



● 기대효과

- 지문확인 및 주민등록증 진위 판별을 통하여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타인사칭 발급 등 부정발급 사례 방지
- 민원처리 시 보다 정확한 신분 확인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

### III 구매계획

- 계약방법 : 수의계약
- 구매규모 : 14대
- 법적근거 :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
- 설치기간 :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

● 소요예산 : 금10,010천원(금일천일만원)

- 715,000(원) × 14(대) = 10,010,000원

● 예산과목 : 구민중심의동행정운영, 편리한민원서비스제공, 주민  
등록등업무관리, 자산취득비, 자산및물품취득비

붙임 : 진위확인시스템 설치현황 및 교체예정 1부. 끝.